

수사권 조정은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 따라야

—— 이 수 호 회원(강남경우회장, 前용산경찰서장)



이 아니고 검찰이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대적이고 서로 간의 권익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 권익을 독점하고 있다. 그 독점하고 있는 권익을 경찰에게 일부 배분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배분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 권익이라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의 자체 조직원들의 물질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의 권익 다툼이나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학계의 이론이나 세계 각국의 제도적 흐름을 보면 경찰 수사권 독립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다만 각국의 역사적 환경에 연유하여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는 체제다.

우리나라도 후진국이라는 과거의 명예를 벗고 이제 선진국이라는 눈앞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뛰어 온 결과 그 문턱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권 배분이라는 체제도 이제는 선진국 제도를 본 따기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본다.

현행 우리나라 수사 구조를 과연 제대로 계속 두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첫째 경찰이 검거 처리하는 범죄 사건은 연간 166만 여건(대검법통 분석 2003)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수사 기관에서 처리한 범죄의 91.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소수의 검사가 이 많은 범죄사건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둘째 경찰에서 수사한 일반 범죄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의견서를 붙이는데 대략 60~70%는 의견서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미한 일반 범죄 사건의 경우 절반가량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검찰이 고려해 주어도 일반 범죄 사건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셋째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미한 사건까지도 전부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다음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 또다시 검찰수사 단계를 거친 다음에 재판에 회부되는데, 검찰의 수사 단계의 중복된 절차를 생각한다면(경찰 수사권이 독립됐을 경우) 국민의 물질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헌법에서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 된다. 이것은 현재 경찰수사의 의견서 제

출이 검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둘째 항목에서 설명)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검찰이 검찰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현재의 우리나라 수사구조를 보면 수사의 주체는 오로지 검찰이고 경찰은 검찰의 보조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사에 관련한 그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체제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어떤 권력도 집중되면 남용과 윤리 의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학설이 다수설임을 인정한다. 선진국의 대부분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이 다르고 경찰수사의 인적 자질 등이 미약함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용인하면서도 아직 시기가 멀었다는 소위 경찰수사권 독립의 시기상조론(時機尙早論)이다. 해방 후 미 군정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려 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1949년 무렵 검사는 200명이 안된 반면 경찰은 5만여명에 달했으나 왜경출신이 대거 포진한 경찰에 대해 인권측면에서 불신감이 컸기 때문에 경찰 견제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찰의 인적 자질은 현저하게 향상 돼 있다. 경찰대와 고시출신 등이 수사 일선에 대거 포진해 있고 순경채용자의 90%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다. 전후 일본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켜 줄 때 인적 자질이 개선된 이후에야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결과는 수사권을 독립시켜주지 않던 경찰이 개선되더라는 경험에서 볼 때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 해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찰의 인적 자질 문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사항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이 되면 인적 자질 문제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하여야만 인권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제5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연설문 내용 중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셨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적절히 간파하신 의미로 검찰과 경찰은 깊이 새겨들고 하나씩 실천에 옮겨 나갈 때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도 선진화로 진입할 것이다.

골칫거리가 된 방법초소

—— 성 환 북 회원(부산경우회 자원위원)

시내주택가나 골목이나 이면도로변 등에서 무분별하게 방치한 부산에는 240여개에 달하는 방법초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예산부족을 핑계로 관리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바람에 파손, 쓰레기더미 등 장기 무단방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만 있을 뿐 아니라 골칫거리로 전락해 있는 것을 경찰, 지자체, 주민 3위 1책이 되어 멍하니 보고만 있는 현황이다.

한 구청 관내에는 40여개의 방법초소가 장기간 파손된 채 방치돼 있고 20여개소는 전혀 무관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부분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구조인 방법초소 자체가 불법건축물인데다가 최근 파출소가 방법지구대로 전환되면서 활용도도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철거나 정비해달라는 민원만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은 제도와 조직에 얽매어 살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 사회규범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무질서를 극복하고 시민문화를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일체감을 되새겨 경찰 각자가 국민정서에 거스르는 행위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

경우인의 한사람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

名士칼럼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록 육심 때문에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본래의 한반도는 금수강산이다.

근대화를 촉진 할만한 천연지하자원은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농사를 짓고 한반도를 둘러싼 3면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일상생활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며 열대지방 또는 한대지방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문화이 있고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는 나라이다.

석유 값이 배럴 당 50달러가 넘으면 산유국인 중동 사람들이 춤을 추겠지만 기름값이 아무리 솟아올라도 극소수 특권층의 호주머니만 두둑해 질 뿐 가난한 서민 대중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런 뜨거운 사막에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공권력을 살려야 한다

—— 이 재 열 회원 (충남 아산 경우회장)



공권하면 경찰권(警察權), 강제권(強制權), 재정권(財政權) 등 국가적 공권과 국권, 자유권 등 개인적 공권으로 구분된다고 배웠다.

근년 우리사회에는 보기도 섬뜩한 검붉은 깃발과 빨간머리띠 그리고 촛불을 들고 시도 때도 없이 민주화를 앞세우고 길거리 공장과 관공서 안팎에서의 과격 한 시위가 빈발, 범죄집서를 어지럽히는가 하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익(公益)과 나라의 체면까지도 뒷전으로 한채 무분별한 시위는 선량한 많은 시민들에게 직, 간접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고 경제가 잘 돌아 할 터인데 하는 나라 격정의 목소리가 都, 農에서 이구동성인 이 때 국민적 불안은 나라발전에도움이 안되고 특히 시위현장에서 큰사고 예방과 질서유지에 수고하는 경찰관들에게 전투적 각목, 쇠파이프 공격은 “공권을 저렇게 깃발야도 되나, 이 나라 법이 언제 저렇게 약해졌나”하는 개탄(慨嘆)의 목소리가 점점 커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국가차원의 뒷받침이나 범국민적 시위불응 운동이라도 전개하여 공권을 살리고 공권의 표상인 경찰피해를 줄이고 경찰력 약화로 증발하는 강력범죄도 하루 속히 소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누대(累代)로 이어온 가난이 5.16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 세계 제2차대전 후 신생 국가 중 가장 잘사는 나라로 발전하여 국민소득이 무려 10,000불을 넘어 20,000불 시대로 가려고 애쓰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사회안정의 기초(基調) 위에서의 산업활동이 여의치 않은 것도 그 하나로 본다.

피의 혁명으로 시작한 불란서의 민주주의도 100년이 걸려서야 정착이 되었단다.

다른 나라들도 민주주의 정착을 하루

일체 36년이 가혹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한국인은 살아서 해방을 맞이했다. 남북으로 국토가 분단된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지만 한반도 전역을 소련이 점령하지 않고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다행 아닌가.

6.25에 그래도 적화통일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오늘 이만한 경제강국이 되었으니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군사정권도 겪었고, IMF의 시련도 있었지만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만은 고수하여 외화보유고 2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데 문제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켜나가야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홀히 여긴 나머지 대북관계에 있어 큰 혼란과 분열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듣기는 좋지만 내용은 없다. “햇볕정책”을 영어로는 선샤인 폴리시(Sunshine Policy)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햇볕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아마도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떤 자가 외투를 입고 가는 데 이 외투를 벗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겨진다. 우선 세찬 바람으로 벗겨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

다. 찬바람이 몰아치니까 이 자는 외투의 옷깃을 여가며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으므로 강풍의 외투 벗기기는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따뜻한 햇볕을 비추어주자 외투를 입고 가던 이 자는 더워서 땀이 나니까 제 손으로 외투를 벗어버렸다. 이 솜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강풍과 햇볕 둘 중에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강풍으로는 안되는 것을 햇볕이 해내지 않았는가. 그런 요지의 우화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외투를 입고 가는 놈이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6.25의 완충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입고 가는 외투를 햇볕으로 벗길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제정신은 아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핵무기를 다 만들었다. 앞으로 6자회담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친 김정일은 안하무인이 아닌가. 국제사회에서 함께 살아나갈 생각은 않고 폭력단의 두목이 칼을 빼들고 “덤벼라, 찌르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런 자를 햇볕으로 달랠 수 있는 것은 큰 잘못 아닌가.

우리도 다 햇볕을 사랑하고 햇볕을 즐기자만 햇볕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

킬 수는 없다.

16대 대통령 노무현은 당선되자마자 김대중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뒤로 점점 더 남북관계는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는 매우 착하고 양심적이며 동시에 유유부단한 대통령이었는데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라는 대한민국의 영광을 포기하고 북을 또 하나의 정부로 인정하고 유엔동시가입을 추진한 것이 그가 상상도 못했던 어려운 남북관계의 큰 원인이 된 것이었다.

북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체불명의 정치집단이 존재하는 것과 그것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두 나라가 하나의 땅덩어리에서 공존할 수는 없다.

북의 인민공화국이 승리하여 한반도가 적화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승리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한반도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역사의 흐름으로 미루어 볼 때 적화통일은 어렵도 없는 수작이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내일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짖을 따름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을 위한 리더십

—— 배 문 한 회원 (중앙회 이사)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전략적 식견을 갖지 못했던 남부동맹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는 스톤웰

잭슨 장군의 전략인 북군 후방의 위싱턴 배후를 공격 북군의 사기와 전쟁의 지를 일거에 꺾고 나아가 승리로 이끈다는 야심찬 전략계획 건의를 묵살할 기함으로서 결국 케디스 버그 전투에서 엄청난 병력손실로 이어져 전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여 만회할 수 없는 몰락의 길을 재촉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나폴레옹도 일찍이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지휘관은 자신의 의도대로 군사들을 지휘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었다.

따라서 ‘머리는 남에게서 빌리면 된다’는 말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는 것이다. 생각이 깊지 못한 이들에게 좋은 교훈의 경우가 아닐 수 없다.

모름지기 조직의 중심에는 그 조직이 통합되고 확고부동한 권위와 가치관 그리고 신뢰감을 갖춘 리더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조직발전을 해 줄 것을 구성원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스토그 딜(K.M. Stogdill)의 말처럼 리더십의 정의가 정의를 내리는 사람 수 만큼이나 많다고는 하나 리더에게는 항상 ‘카이사르의 아내’ 골레에서도 완전해야 한다고 역사에서는 주문(注文)하고 있다.

현재는 21세기 디지털 무한 기술경쟁시대에서 기술력이 곧 힘이고 1등이 아니면 끝이다 라는 절박한 상황이 우리의 처지를 숨가쁘게 내몰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와 맞물려 예측불허의 사항들로 해서

곤혹스럽고 불안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좌표에 경찰의 혼에 대한 관심이 실리면서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은 잃지 말아야 하겠다.

그 동안 우랄알타이 가미민족(騎馬民族)이 좁은 한반도에 정착 이후, 농경사회 전환으로 기상을 접었으나 인터넷이란 무한의 지적 공간에서 질주 불능의 이상적 기동성을 발휘, 이제는 민족의 정기를 되살려서 도전의 용기를 북돋아 부국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다는 우리가 과거 어느 누구도 예측 못했던 기적(奇蹟)을 몇 번이나 일구어 내지 않았던가. 한 시가 급한 우리 처지이기에 이제 실기하면 영영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때로써 것이다.

시간은 결코 아무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국가 안보 환경을 확고하게 다져야 할 시점에서 건국경찰, 국군경찰, 호국경찰로서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강력한 안보 가치관을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새겨 넣어야 할 것이다.

지난날의 역사가 그랬듯이 주변국으로부터 피침(被侵)과 수모(受侮)를 수없이 받아 왔던 사실을 잊지 말고 분기(憤氣)하여 우리 후손들에게는 당당(堂堂)하고 신념에 찬 환경 속에서 꿈의 터전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책무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카플란은 “역사, 지리, 문화는 미래를 위한 하나의 일관된 길잡이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비범(非凡)한 인물들 영향력 아래선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그의 저서 ‘타타르 가는길’에서 밝히고 있다.

조직의 앞날은 리더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하는 대목이다.

「경우신문」 원고 모집

- ◎ 時論, 提言
- ◎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 중 그때그때 사회문제화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논평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
- ◎ 독자의 소리
- ◎ -일상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낀 일 중에서 이것만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
- ◎ “이래도 뭘니까”
- ◎ -전·현직 누구나 ‘체면한 일’ 중에서 사회 고발성’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 (특히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

- ◎ 취미나 건강
- ◎ -노후인생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건강비밀이나 취미생활
- ◎ 行事, 動靜, 結婚, 訃告 等
- ◎ -支部, 支會 행사 또는 동계생 모임이나 경찰제직증 갱신회 각종 모임 소식
- ◎ -회원의 출신계급과 관내·외 거주를 불문하고’ 소식과 動靜을 사진과 함께 송부
- ◎ -결혼, 부음 등은 일시 장소와 회원의 관계를 명시
- ◎ -경우회의 발전방향이냐 경찰과 관련이 있는 내용
- ※ 200자 ‘원고지’ 6매(A4용지) 2매) 內외로’ 작성하여 경우신문 담당자 앞으로 송고